

수상레저 활성화의 제약요인 및 발전방안에 대한 인식도 조사

조우정* · † 장보영

*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체육학과 부교수, † RNJG 대표이사

Analyses of Perceptions to Hindering Factors and Development Factors for Water Leisure Activation

Woo-Jeong Cho* · † Bo-Young Jang

*Dept. of Ocean Physical Education, Korea Maritime University, Busan 606-791, Korea

† RNJG, 182-13 Gurodong, Gurogu, Seoul 151-051, Korea

요 약 : 본 연구는 수상레저 활성화의 제약요인과 발전방안에 대한 인식도 차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전국 6개 권역의 수상레저 활동자와 종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20개의 수상레저 제약요인 중 면허제도, 활동제한 규정, 출항신고규정, 전담조직부재, 정보제공미흡, 참여이벤트 부족 그리고 지원정책 제도 등 6개 요인에서 활동자들이 인식하는 제약수준이 종사자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상레저 활동의 제약요인으로는 출항신고규정, 활동제한규정, 면허제도, 지원정책 부재, 계류시설 그리고 전담조직 부재 등에 대한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수상레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도 차이에서는 활동자들은 면허 및 연수비용 지원, 프로그램 다양화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반면 종사자들은 교육인력 배치와 대회유치홍보 요인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수상레저 발전방안으로는 무료체험활성화, 마리나개발촉진, 면허연수비지원, 프로그램다양화 그리고 사업지원 등의 요인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부와 지자체가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 시행에 필요한 수상레저 활동자와 종사자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핵심용어 : 수상레저, 제약요인, 발전방안, 인식도, 수상레저안전법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perceptions to hindering factors and development factors for water leisure activation. In order to accomplish the study purpose, this study employed a survey method with water leisure participants and employees from 6 regions(participants=205, employees=117).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independent t-tests at $\alpha=.05$ and following findings were derived from current study. First, among 20 hindering factors, water leisure participants had higher levels of perceptions than employees in licence system, limited activation regulation, departure report regulation, absence of exclusive organization, lack of providing information, lack of participative events and support systems. Second, relatively highly perceived hindering factors included departure report regulation, limited activation regulation, licence system, lack of government support, lack of mooring facility and lack of exclusive charged organization, in order. Third, the important development factors perceived by participants included support for licence and education and diversified water leisure programs but those perceived by employees included placement of educated experts and related event host and publicity. Finally, relatively highly perceived development factors included activation of free experience, promotion of marina development, support for licence and education, diversified programs and support for water leisure business. Accordingly, the findings provided fundamental information that both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 can utilize for further activating water leisure. In addition, several development strategies were discussed on financial support, facility support, human resource support, education support and event support perspectives.

Key words : Water leisure, hindering factors, development factors, Water Leisure Safety Act

1. 서 론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사회문화, 경제적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수상레저는 새로운 여가 문화 수단뿐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미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KCG, 2012), 정부와 지자체는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전략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수상레저의 기반시설인 마리나항만 사업에 대한 정책과 법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전국의 120여개 지자체에서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자체의 수상레저산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 경기국제보트쇼와 복합해양레저 산업단지 추진하고 있으며 경상남도의 대한민국체보트쇼와

* 연회원, mikecho@hhu.ac.kr 051) 410-4794

† 교신저자 : 연회원, ceo@rnjg.co.kr 02) 839-1383

해양레저산업클러스터 사업 그리고 각종 지자체의 수상레저 육성 조례 제정 등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펼쳐지고 있는 실정이다(Choi, 2011).

이러한 수상레저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수상레저 활동인구는 2011년 현재 406만명으로 증가했으며 수상레저 잠재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취득자도 11만명을 넘었다(KCG, 2012). 더불어 수상레저 기반시설인 마리나는 전국적으로 14곳이 운영중이며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장비등록현황은 9178대, 선박법에 의한 등록 장비 현황은 1306대로 증가하였다. 또한 수상레저 장비 제조 및 판매업체는 109개 업소, 수상레저서비스업체는 전국에 864개 이상의 업체가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Cho, 2012b).

하지만 국내 수상레저 시장은 선진국과 비교해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며 산업적 측면에서도 미흡한 실정이다. 첫째, 수상레저 참여인구는 2008년 이후 2010년까지 감소하고 있다. 특히 수상레저산업의 시장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수상레저 활동 참가율 등 마케팅 정보는 전무한 상황이다. 둘째, 수상레저 기반시설인 마리나의 공급율은 17.8%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셋째, 선진국의 수상레저 시장에서 국내 수상레저 시장점유율은 500억달러 세계 시장 중 0.02%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수상레저 장비의 국산화율 및 기술경쟁력은 30% 수준 이하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Cho, 2012b). 넷째, 수상레저에 대한 지자체간 경쟁적 투자는 중복투자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대규모 인프라구축 중심의 투자는 정부의 예산 및 민간 투자 확보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다섯째, 기술경쟁력이 약한 장비산업 중심의 투자는 관련 서비스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무엇보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와 제도적 요인은 수상레저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상레저 활성화의 제약요인과 발전방안에 대한 수상레저 활동자 및 종사자간 인식도를 비교 분석해 지속가능한 수상레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 선행연구

수상레저 활성화의 선행연구 분석은 수상레저 제약요인과 발전방안으로 구분해 기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수상레저 활성화의 제약요인으로 Hong(2006)는 개인용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으로 인한 사고의 피해자 보호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수상레저기구의 보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Shon(2007)은 수상레저 활성화를 뒷받침할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의 지원 미흡을 지적하며 수상레저 관련 안전사고, 수상레저 업체의 서비스 부족,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수상레저 활성화를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그는 수상레저 사고의 원인을 운항 부주의, 법규 위반 그리고 안전장비 미착용 등의 과실 및 안전의식 결여 문제로 보고 지속적

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Lee, Shin & Park(2008)는 개인적 측면에서 수상레저 활성화 저해요인을 분석한 결과 수상레저 보트 구입시의 금융시스템과 지방세 부과세, 정박 장소 부족, 검사와 등록 절차, 야간활동 등 운항 규제, 면허제도, 어민과의 갈등과 감독관청의 부정적 인식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정적 시각에 바탕을 둔 수상레저 제도가 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Lee et al.(2009)은 수상레저 활동 참여 제약요인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서 수상레저에 대한 개인내적 제약과 사회구조적 제약 요인을 규명하였다. 그 결과 개인내적 제약요인으로는 수상레저에 대한 위험성 인식, 사고의 개연성 등 수상레저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며 사회구조적으로는 기후, 계절, 시간과 접근 기회의 부족, 시설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Choi(2011)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수상레저 활성화 제약요인으로 요트 등록 의무화, 요트조종면허 취득 등 규제 위주의 제도, 수상레저안전법과 선박안전법 등의 이원화 등이 수상레저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그는 수상레저 활동을 규제하는 법률로서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시설 개발과 운영에 관한 해양수산발전기본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연안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등 20여개의 개별 법률의 난립과 적용이 수상레저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수상레저 활성화 방안으로 Kim & Guk(2005)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명시된 안전교육, 등록제도, 동력수상레저기구 보험 그리고 안전검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Lee & Yeo(2005)도 수상레저안전법의 등록 및 안전검사와 관련해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과 적용범위에서 상충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입법취지에 맞는 법적용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수상레저 활동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Hong(2006)는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해 개인용 수상레저기구 배상책임의 범위를 강제보험 가입대상 수상레저 기구의 확대 적용, 손해배상책임규정의 신설, 보험계약체결의 강제 규정 등의 신설을 통해 수상레저 안전사고에 따른 배상책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Lee et al.(2008)은 수상레저 활동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상레저 활성화 요인으로 마리나 시설 확충, 관련 제도 개선, 레저보트에 중과되는 지방세 개선, 검사기준 개선 및 절차 및 간소화, 금융지원 제도 개발, 면허제고 개선, 기술력 향상 등의 요인을 지적하였으며 수상레저 활성화 방안으로 정책적 요인, 교육적 요인, 시스템적 요인 그리고 통합 정보시스템적 요인 등을 제시하였다. 먼저 정책적으로는 수상레저 활동을 규제하는 관련법들을 개정해 규제 중심에서 활성화 중심으로 개선해야 하며, 교육적 요인으로는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교육과정으로의 편성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시스템적 요인으로는 수상레저 활동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과 협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서로 협조적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통합정보시스템적 요인으로는 수상레저 활동의 가치와 대중화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 채널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Choi(2011)는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해 조종면허 시험제도의 개선과 레저선박 검사기준의 완화 등 수상레저안전법 상의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Choi & Seong(2012)은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 과제에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수상레저 시설, 안전, 해양환경, 행정지원, 전문인력, 홍보 등의 요인을 도출했으며 구체적 항목으로는 수상레저 시설의 설립정책, 수상레저안전법의 위상강화, 수상레저 활동의 특구화, 전문가 양성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된 수상레저 활성화의 제약요인 및 발전 방안은 수상레저안전법 등의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 30마력 이상 고무보트, 20톤미만 모터보트/동력요트), 도심지의 수상레저기구 렌탈업에 대한 완화, 조종면허 관련 교육과정 이수제도 신설 그리고 조종면허 미경신사의 처리절차 변경 등 수상레저안전법이 수상레저 활동자와 종사자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는 실정이다(KCG, 2012).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측면을 제외한 수상레저 인프라 구축, 교육 시스템, 재정 확보 그리고 인적 자원의 양성과 관리 등 수상레저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토대 및 여건은 여전히 미흡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

3. 연구방법

3.1 조사대상

수상레저 활성화의 제약요인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위한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수상레저 사업자 및 활동자를 모두 포함하였다. 조사대상은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강원권 그리고 제주권에서 수상레저 사업장을 이용하는 활동자와 종사자를 모집단으로 선정하고 편의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2년 10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수행되었으며 수상레저 사업장을 사전에 교육 받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조사내용을 설명하고 설문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어 설문지를 배포 및 회수하였다. 수상레저 활동자에 대한 설문조사는 총 270부를 배포한 결과 245부를 회수하였으며 조사내용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하게 답변된 자료 40부를 제외한 205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수상레저 종사자는 총 150부 설문지를 배포해 130부를 회수하였고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한 13부를 제외한 117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rvey participants

구분	대포켓값		빈도(퍼센트)
활동자 (N=205)	연령	30세이하	66(32.2)
	직업	자영업	66(32.2)
	거주지역	경상권	86(42.0)
	월지불비용	5만원미만	63(30.7)
	활동주기	1주일 1회이상	74(36.1)
	활동구역	항만	62(30.2)
종사자 (N=117)	사업기간	3년~5년	48(41.0)
	사업장신고	수상레저사업	42(35.9)
	거주지역	경상권	41(35.0)
	사업장구역	어항	44(37.6)

3.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설문지로 조사대상에 대한 일반적 특성(활동자 6문항, 종사자 4문항), 수상레저 활성화 제약요인 20문항 그리고 수상레저 활성화 방안 18문항 등 총 4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수상레저 활성화 제약요인은 Choi(2011) 등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설문문항을 도출하였으며 활성화 방안은 KAMI(2009), Cho(2012a) 그리고 Choi & Seong(2012) 등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재정지원, 시설지원, 제도지원, 인력지원, 교육지원 그리고 이벤트 지원 등 6개 요인 18개 문항을 도출하였다(Table 2 참조). 이렇게 도출된 설문지의 문항과 요인은 본 연구의 연구 상황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하였으며 특히 수상레저 전문가에 의해 내용의 적절성, 의미성 그리고 대표성 등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설문문항 중 인구통계적 특성은 명명척도 그리고 수상레저 제약요인 및 활성화 방안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한편 조사도구의 신뢰성을 검증한 결과 수상레저 활성화 제약요인은 Cronbach's $\alpha = .919$ 로 나타나났으며 재정지원($\alpha = .742$), 시설지원($\alpha = .722$), 제도지원($\alpha = .732$), 인력지원($\alpha = .734$), 교육지원($\alpha = .729$) 그리고 이벤트지원($\alpha = .739$) 등으로 나타나 조사도구의 신뢰성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Reliability of instrument

구분	신뢰도	선행연구	
제약요인 (20개항목)	.919	Choi(2011), Lee et al.(2009), Lee & Yeo(2005), Shon(2007), Kim & Nam(2010), KAMI(2009)	
활 성 화 방 안	재정지원요인	.742	Kim & Guk(2005), Kim & Lee(2008), Shon(2007), Park(2005), Kim(2001), Jeong & Hur(2004), Lee & Kwon(2003), Shin & Shon(2007), Lee et. al. (2009), Cho(2012b), Choi & Seong(2012)
	시설지원요인	.722	
	제도지원요인	.732	
	인력지원요인	.734	
	교육지원요인	.729	
	이벤트지원요인	.739	

3.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Vet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조사도구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 검사를 실시하였고, 수상레저 활동자와 종사자의 인지된 제약요인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차이는 독립 t 검증을 유의수준 $\alpha=.05$ 수준에서 실시하였고 제약요인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우선순위 검증은 기술 통계 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4. 결 과

4.1 수상레저 활성화 제약요인에 대한 인식도 차이

수상레저 활성화 제약요인에 대한 활동자와 종사자간 인식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나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20개의 제약요인 가운데 면허제도, 활동제한 규정, 출항신고규정, 전담조직부재, 정보제공미흡, 참여이벤트부족 그리고 지원정책제도 6개 요인에서 활동자와 종사자간 인식도 차이가 유의하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식 차이가 나타난 6개 요인 모두 활동자들의 평균값이 높았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요인들은 활동자들에게 더 심각한 수상레저 활성화 제약요인이라는 것이다. 한편, 통계적 유의도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안전검사, 교육프로그램, 전문선수양성체계, 관련대회, 장비업체, 교육업체 등의 요인에서는 종사자들의 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Perceived hindering factors to water leisure activation

제약요인	집단	평균	표준 편차	t	p
면허제도	활동자	4.08	1.179	3.174	.002
	종사자	3.65	1.177		
등록제도	활동자	3.71	1.099	.609	.543
	종사자	3.63	.988		
안전검사	활동자	3.43	1.117	-1.870	.062
	종사자	3.67	.991		
활동제한규정	활동자	4.08	.915	3.396	.001
	종사자	3.71	.975		
출항신고 규정	활동자	4.07	.958	2.653	.008
	종사자	3.76	1.072		
계류시설	활동자	3.80	1.076	1.011	.313
	종사자	3.68	1.158		
교육프로그램	활동자	3.19	1.166	-.109	.913
	종사자	3.21	1.186		
전문인력	활동자	3.28	1.320	.121	.904
	종사자	3.26	1.213		
전담조직부재	활동자	3.83	1.164	1.998	.047
	종사자	3.56	1.269		
정보제공미흡	활동자	3.69	1.150	2.493	.013
	종사자	3.35	1.199		
전문선수양성	활동자	2.62	.986	-1.234	.218

체계	종사자	2.77	1.148		
관련대회	활동자	2.77	1.169	-.280	.780
	종사자	2.80	1.139		
참여이벤트 부족	활동자	3.74	1.092	3.221	.001
	종사자	3.31	1.276		
홍보마케팅	활동자	3.41	1.204	1.497	.135
	종사자	3.21	1.214		
개발관련법	활동자	3.58	.934	.880	.379
	종사자	3.48	1.103		
운영관련법	활동자	3.55	.987	1.152	.250
	종사자	3.41	1.168		
장비업체	활동자	3.21	1.024	-.244	.807
	종사자	3.24	1.080		
교육업체	활동자	3.23	1.135	.639	.523
	종사자	3.25	.988		
서비스업체	활동자	3.32	1.081	1.130	.259
	종사자	3.18	.997		
지원정책제도	활동자	3.92	1.044	2.542	.011
	종사자	3.62	1.252		

4.2 수상레저 활성화 제약요인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

수상레저 활성화 제약요인에 대한 우선순위를 활동자와 종사자의 인식도를 종합해 기술통계(평균)를 통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나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수상레저 활성화 제약요인으로는 출항신고규정, 활동제한규정, 면허제도 5), 지원정책, 계류시설, 전담조직부재, 그리고 등록제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선수양성, 관련대회,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수상레저 활성화 제약요인의 우선순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Table 4 Priority in hindering factors

제약요인	최소 값	최대 값	평균	표준 편차	순위
출항신고규정	1	5	3.96	1.010	1
활동제한규정	1	5	3.94	.952	2
면허제도	1	5	3.93	1.195	3
지원정책	1	5	3.83	1.133	4
계류시설	1	5	3.76	1.107	5
전담조직부재	1	5	3.73	1.209	6
등록제도	1	5	3.68	1.059	7
참여이벤트부족	1	5	3.58	1.179	8
정보제공미흡	1	5	3.57	1.178	9
개발관련법	1	5	3.54	.998	10
안전검사	1	5	3.52	1.077	11
운영관련법	1	5	3.50	1.057	12
홍보마케팅	1	5	3.34	1.210	13
전문인력	1	5	3.28	1.281	14
서비스업체	1	5	3.27	1.052	15
장비업체	1	5	3.22	1.043	16
교육업체	1	5	3.20	1.083	17
교육프로그램	1	5	3.20	1.172	18
관련대회	1	5	2.78	1.157	19
전문선수양성	1	5	2.67	1.048	20

4.3 수상레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도 차이

수상레저 활성화 방안에 대한 활동자와 종사자간 인식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나 있다. 18개 수상레저 활성화 방안 중에서 면허 및 연수비용 지원, 교육인력배치, 프로그램 다양화, 대회유치 및 홍보 4개 요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식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수상레저 활동가들은 면허 및 연수비용 지원과 프로그램 다양화, 반면 종사자들은 교육인력배치와 대회유치홍보 요인을 더 중요한 활성화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Table 5 Perceived strategic factors to water leisure activation

구분	제약요인	집단	평균	표준편차	t	p
제정 지원	사업자지원	활동자	4.27	.748	.322	.748
		종사자	4.24	.827		
	면허 연수비지원	활동자	4.43	.694	3.614	.000
		종사자	4.08	1.052		
	사업자용자제도	활동자	4.08	.865	-5.84	.559
		종사자	4.14	.870		
시설 지원	마리나개발촉진	활동자	4.45	.689	1.896	.059
		종사자	4.28	.869		
	간이계류시설확대	활동자	4.12	.958	.783	.434
		종사자	4.03	.830		
	단지구역지정	활동자	4.18	.908	1.891	.060
		종사자	3.98	.890		
제도 지원	활동규제완화	활동자	4.21	.812	-.250	.803
		종사자	4.24	.916		
	등록절차간소화	활동자	3.96	.879	-1.480	.140
		종사자	4.11	.869		
	안전검사편리성	활동자	3.80	.915	-.923	.357
		종사자	3.90	.904		
인력 지원	전문가양성	활동자	3.96	1.104	.706	.481
		종사자	3.87	.886		
	교육인력 배치	활동자	3.72	1.060	-2.227	.027
		종사자	3.97	.814		
	전담기관설치	활동자	3.91	1.231	-1.252	.212
		종사자	4.07	.858		
교육 지원	무료체험활성화	활동자	4.48	.725	1.782	.076
		종사자	4.32	.877		
	프로그램다양화	활동자	4.37	.700	3.307	.001
		종사자	4.07	.926		
	전문교육기관선정	활동자	3.99	.988	-1.548	.123
		종사자	4.15	.874		
이벤트 지원	대회유치홍보	활동자	3.72	1.149	-2.575	.010
		종사자	4.04	.932		
	참여이벤트활성화	활동자	4.16	.862	1.423	.156
		종사자	4.02	.890		
	전시컨퍼런스지원	활동자	3.74	1.008	-1.124	.262
		종사자	3.87	.987		

4.4 수상레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

수상레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활동자와 종사자의 중요도를 종합해 기술통계를 통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6에 나타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상레저 활성화 방안으로는 무료체험활성화, 마리나개발촉진, 면허연수비지원, 프로그램 다양화, 사업자지원 그리고 활동규제 완화 등의 요인에 대한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전시컨퍼런스 지원, 교육인력배치, 검사편리성 그리고 대회유치 홍보, 전문인력양성 등과 같은 요인에 대한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Priority in strategic factors to activation

제약요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순위
무료체험활성화	1	5	4.42	.786	1
마리나개발촉진	1	5	4.39	.762	2
면허연수비지원	1	5	4.30	.857	3
프로그램다양화	1	5	4.26	.801	4
사업자지원	2	5	4.26	.777	5
활동규제완화	1	5	4.22	.850	6
단지및구역지정	1	5	4.11	.905	7
참여이벤트지원	1	5	4.11	.874	8
사업자용자제도	1	5	4.10	.866	9
간이시설확대	1	5	4.09	.913	10
전문교육기관선정	1	5	4.05	.941	11
등록절차개선	1	5	4.02	.877	12
전담기관설립	1	5	3.97	1.112	13
전문인력양성	1	5	3.93	1.029	14
대회유치홍보	1	5	3.84	1.085	15
검사편리성	1	5	3.84	.911	16
교육인력배치	1	5	3.81	.984	17
전시컨퍼런스지원	1	5	3.79	1.001	18

5. 논의 및 결론

5.1 논의

수상레저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면서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왔으며 이를 통해 활성화를 위한 제약요인과 발전방안 등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 왔다. 하지만 급변하는 수상레저 활동 환경은 수상레저 활동자와 종사자들의 필요와 요구를 다양화시켰으며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전략이 수립 및 실행되어야함을 본 연구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수상레저 활성화의 제약요인과 발전방안에 대한 활동자와 종사자의 인식 차이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수상레저 활성화 방안을 제정, 시설, 제도, 인력, 교육 그리고 이벤트 지원 등 6가지 차원에서 간략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부문에서는 종사자 또는 사업자를 위한 지원 방안과 활동자를 위한 면허 연수비 지원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수상레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수상레저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인프라 구축에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공유수면점유사용권에 대한 감면 혜택 등의 재정지원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수상레저 사업자가 수상레저 리조트나 계류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창업지원사업이나 융자금 지원사업 등을 활용해 수상레저 용품 및 서비스사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수상레저 활동자에 대해서는 면허 및 연수비 지원 등을 통해서 놓여준 거주자, 저소득층 그리고 창업 예정자들에게 수상레저 교육 바우처 제도 등을 도입해 잠재 시장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

시설지원 부문에서는 수상레저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마리나개발촉진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왔는데 이는 마리나항만법 제정후 국가의 마리나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상레저 기반시설인 마리나의 조기 착공과 운영을 위해 마리나개발의 이해당사자인 지자체, 민간사업자 그리고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보다 능동적 지원 태도와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Shim, 2012). 또한 대규모 마리나항만 개발로 인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 사업 추진의 부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상레저 활동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간이계류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등의 수변공간 개발에 장기적 플랜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KAMI, 2009). 더불어 정부는 수상레저활동의 급지구역 설정 등 규제 중심의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수상레저 리조트 및 복합 마리나 단지 등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특별단지 또는 클러스터를 지정, 육성할 필요가 있다.

제도지원 부문에서는 주로 수상레저 활동자와 종사자의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이를 종합하면 수상레저 활동규제 완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절차 간소화 그리고 안전검사 등에 관한 내용이다(KCG, 2012). 이에 정부는 수상레저 활동과 관련 사업을 규제하고 있는 수상레저안전법을 1999년 제정한 이후 2013년 현재 6차에 걸쳐 활동자와 종사자의 요구를 반영해 관련법을 개정하는 노력을 펼쳐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수상레저 현장에서는 수상레저사업장으로 공유수면 점유사용 허가를 받으면 독점적으로 공유수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기존 20톤 이상의 모터보트는 선박법 등록 대상으로 해기사 면허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지만 스피드보트급인 67톤 미만까지 수상레저안전법상 등록기준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수상레저 활동의 수요자 및 공급자들의 요구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이를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수상레저 관련산업이 초보적인 현 단계에서 수상레저 전문인력의 양성과 공급은 수상레저 활성화의 핵심이다. 먼저 수상레저를 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수상레저 시설 개발 및 운영 그리고 수상레저 서비스 전문가의 양성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대학이 책임져야 할 부문이다(Cho, 2012b). 하지만 현재 수상레저 현장은 인력수급의 불균형으로 계획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거나 경영 효율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뒤처져 있는 실정이다. 또한 수상레저 활동의 대중화를 위한 각종 수상레저 아카데미 및 스쿨의 강사 및 지도자도 양적으로도 충분하지 못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도 서비스마인드의 부재 등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한편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전담기관을 설치해 전문적으로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지자체에서 수상레저 전문가를 채용해 수상레저 아카데미 및 이벤트 개최 등의 지원업무를 맡고 있으나 보다 효과적으로 수상레저를 활성화하고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도적 지원 필요하며 해양경찰청도 증가하는 수상레저 업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구의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범정부 차원에서는 수상레저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과 지원부서의 다원화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예, 미국해양경찰청 국가레크레이션보트안전프로그램과 국가보트안전자문위원회, 호주의 수상안전위원회).

교육지원 부문에서는 수상레저를 미래 성장산업으로 인식한 2011년부터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상레저 활성화 정책 중의 하나이다. 특히 수상레저 저변확대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수상레저무료체험 50만명 목표를 세우고 각종 수상레저 교육프로그램, 체험교실 개설, 캠프 운영 및 시범학교 개설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분야이다(MLTMA, 2011). 하지만 아쉬운 것은 이렇게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수상레저 활동에 체험한 일반인이 지속적으로 수상레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호회 지원과 이벤트 참여 지원 등 수상레저 활동 참여의 선순환적 구조를 만들기 위한 후속 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고급 수상레저로 인식되고 있는 요트 중심의 수상레저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수상레저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이 시급하다. 선진국의 경우 요트뿐 아니라 서프보트, 수상스키 그리고 각종 뉴 수상레저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이 수상레저의 새로운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현재 해양경찰청에서 모터보트 및 요트 조종면허 시험의 교육과 연수를 위해 지정한 수상레저 교육기관뿐 아니라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교육, 기술훈련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공공 및 민간 수상레저 전문교육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기존에 정부의 수상레저 교육을 위탁 받아 운영했던 수상 또는 해양 관련 단체 및 협회가 수상레저 전문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벤트지원 부문은 수상레저 활동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마케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분야이다. 수상레저에 대한 관심으로 수상레저 관련 이벤트의 양적인 성장은 지속되고 있으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엘리트선수 중심의 이벤트가 주로 개최되고 있으며 수상레저 이벤트가 갖고 있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부가가치를 효과적으로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Cho, 2012a). 따라서 수상레저 시장의 잠재소비자를 증진시킬 수 있는 참여형 또는 동호인형 수상레저 이벤트의 확대 개최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수상레저 교육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수상레저 용품 및 서비스 사업자의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전시이벤트가 필요한데 현재는 전국적으로 2개 정도의 대규모 이벤트만이 매년 개최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상레저 수요자 측면에서는 수상레저 활동 관람, 체험 그리고 교육 기회를 통해 잠재 소비자로 유입될 수 있는 기회이며 사업자 측면에서는 잠재 시장의 수요를 예측하고 마케팅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다. 따라서 수상레저 용품 제조 및 서비스업체들의 국내외 수상레저 전시이벤트 참가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5.2 결론

본 연구는 수상레저 활성화의 제약요인과 발전방안에 대한 인식도 차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전국 6개 권역의 수상레저 활동자와 종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20개의 수상레저 제약요인 중 면허제도, 활동제한 규정, 출항신고규정, 전담조직부재, 정보제공미흡, 참여이벤트 부족 그리고 지원정책 제도 등 6개 요인에서 활동자들이 인식하는 제약 수준이 종사자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상레저 활동의 제약요인으로는 출항신고규정, 활동제한규정, 면허제도, 지원정책 부재, 계류시설 그리고 전담조직 부재 등에 대한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수상레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도 차이에서는 활동자들은 면허 및 연수비용 지원, 프로그램 다양화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반면 종사자들은 교육인력 배치와 대회유치홍보 요인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수상레저 발전방안으로는 무료체험활성화, 마리나 개발촉진, 면허연수비지원, 프로그램다양화 그리고 사업자지원 등의 요인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부와 지자체가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 시행에 필요한 수상레저 활동자와 종사자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후 기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 되었음(NRF-2011-322-G0016)

참 고 문 헌

- [1] Cho, W. J.(2011). "The effect of a marine leisure exhibition event's appraisal attributes on visitors' satisfaction and re visit inten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Vol. 35, No. 4, pp. 335-342.
- [2] Cho, W. J.(2012a). "Analyses of consumer preferences and perceptions regarding activation of yacht tourism industry".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Vol. 36, No. 5, pp. 401-407.
- [3] Cho, W. J.(2012b). "A study of strategies for developing cooperative systems for marine leisure industry". *Korean Society for Sport Management Spring Seminar*.
- [4] Choi, C. H.(2011). "Legal issues in marine leisure sports and improvement plan". *Sports & Laws*, Vol. 14, No. 1, pp. 181-196.
- [5] Choi, S. D. & Seong, B. H.(2012). "Formulation of the pool for yacht tourism enhancement policies and hierarchical analysis using AHP". *Tourism Research Review*, Vol. 24, No. 1, pp. 73-90.
- [6] Hong, S. H.(2006). "A study on the some considerations of personal water leisure craft liability insurance". *Business Law Review*, Vol. 20, No. 2, pp. 305-326.
- [7] Jeong, J. S. & Hur, I.(2004). "A study on developing Korean marina operation for yacht industry".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Vol. 28, No. 1, pp. 899-908.
- [8] Kim, C .R, & Lee, J .H.(2008). "A study on development strategies for marine leisure sports".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Vol. 32, No. 5, pp. 415-423.
- [9] Kim, J. H. & Guk, S. G.(2005). "Analysis on the actual condition of consciousness for related regulations with revised water leisure safety regulation". *Journal of Korean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Vol. 29, No. 10, pp. 891-896.
- [10] Kim, K. R.(2001). "A study on providing policies for marine leisure sports development". *KAHPERD 2001 Seoul International Sport Science Congress*.
- [11] Korea Association of Marine Industry(2009). *Activation Strategies for Busan marine sport events*. Research Report.
- [12] Korea Coast Guard(2012). *2012 KCG White Paper*.
- [13] Lee, J. H. & Kwon, H.D.(2003). "A study on importance and activation strategies for marine sport tourism". *Korea Sport Research*, Vol. 14, No. 6, pp. 1169-1182.

- [14] Lee, J. M., Shin, Y. J. & Park, J. S.(2008). "A study for the vitalizations of marine leisure sports".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Vol. 32, No. 8, pp. 6425-652.
- [15] Lee, K. M. et al.(2009). "A study of knowing issues of activation marine leisure sports and the method of its improvement".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48, No. 6, pp. 111-124.
- [16] Lee, Y. C., & Yeo, S. K.(2005). "A study on reform for subordinate laws of the marine leisure safety act". 2005 Marine Environment and Safety Association Congress, pp. 111-124.
- [17] Ministry of Land, Transportation and Maritime Affairs(2011). Marina industry activation strategy. Press Report.
- [18] Park, S. H.(2005). "A study on current state and problems of yacht industry". Journal of Marine Environment and Safety, Vol. 11, No. 1, pp. 47-52.
- [19] Shin, D. J. & Shon, J. Y.(2007). "A study on current state and policy for marine tourism development". Marine Policy Review, Vol. 22, No. 2, pp. 1-27.
- [20] Shon, S. J.(2007). "A study on the safety regulation in the marine leisure sports". Sports & Laws, Vol. 10, No. 3, pp. 285-307.

원고접수일 : 2013년 4월 29일
심사완료일 : 2013년 6월 18일
원고채택일 : 2013년 6월 24일